

##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2652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3.

제출자 : 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, 고액·상습체납자 감치(監置)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·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, 「국세기본법」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



##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실태조사)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,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 한다)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”를 “제1항 각 호”로 한다.

### 5. 가상자산의 매각

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.

1.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
2.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

제5장(제116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5장 벌칙

제116조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액·상습채납자의 감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국세청장이 감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0조의2(실태조사)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,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 한다)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</u></p>

제103조(공매등의 대행)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이 조에서 “공매등”이라 한다)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1. ~ 4. (생략)

## <신 설>

② (생략)

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.

④ (생략)

제115조(고액·상습채납자의 감  
치) ① (생략)

## <신 설>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3조(공매등의 대행) ① 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## 5. 가상자산의 매각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1항  
각 호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5조(고액·상습채납자의 감  
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

② (생략)

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,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.

1.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

2.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----- 제3항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
⑧ -----

-----  
----- 제7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p><u>⑧ (생략)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</u></p> <p><u>제5장 벌칙</u></p> <p><u>제116조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--	---

##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수입 : △9억원

구 분 \ 연 도								(단위: 억원)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지출			해	당	없	음		
	소 계(A)							
수입	○ 채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 마련 (국징법 §10의2, §116)		추	정	곤	란		
	○ 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 (국징법 §103)	△1	△2	△2	△2	△2	△9	△1.8
	○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(국징법 §115)		추	정	곤	란		
	소 계(B)	△1	△2	△2	△2	△2	△9	△1.8
총 비용(A-B)		△1	△2	△2	△2	△2	△9	△1.8

## 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10조의2, 제116조 (채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)	채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채납자를 유형화하여 사례별 맞춤형 채납징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
2	제103조 (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)	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에게 위탁하기 위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세수가 감소하게 됨
3	제115조 (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)	국세 채납액을 50%이상 납부 시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 라 납세자의 채납액 납부 요인이 발생하여 세수가 증가하게 됨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조의2, 제116조 (채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)	×	채납자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채납징수를 추진하여 납부될 채납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2	제103조 (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)	○	
3	제115조 (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)	×	감치 대상 제외로 인해 납부될 채납액을 합 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○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, 개정 법률안이 ' 25.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  
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(국징법§10의2, §116)

##### ○ 세수증 : 추정곤란

- 체납자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체납징수를 추진하여 납부될 체납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#### ② 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(§103)

##### ○ 세수감 : △2억원

- 최근 3년간('21년~'24년) 연평균 압류 가장자산(365억원) - 연평균 현금징수 가상자산(181억원) = 연평균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추정액(184억원)
- 가상자산 매각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수수료율: 1.2%
- '26.7.1. 시행으로 '26년은 연 1억원 세수감 추정

#### ③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(§115)

##### ○ 세수증 : 추정곤란

- 감치 대상 제외로 인해 납부될 체납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## VI. 작성자

### 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팀장	실장·국장
전해일	박해용	김성수	조만희

### 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해용	044-215-4152	pplong@korea.kr

\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

##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### 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○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### II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○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### III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○ '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·감면 효율화,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

### IV. 부대의견

○ 해당없음

### 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-	-	해당사항 없음 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### VI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팀장	실장·국장
전해일	박해용	김성수	조만희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해용	044-215-4152	pplong@korea.kr

\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